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폐기
심사보고서

2026. 10.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9월 30일, 나경원의원 등 105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10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2026.10.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10.1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7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2026.10.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나경원의원)

2026년 9월 21일 오전, 육군 제25사단 작전지역 내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었음. 공병 부사관 1명이 1차 폭발로 부상을 입었고, 구조를 위하여 현장에 진입한 수색대대장이 2차 폭발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작전에 투입된 장병 18명 전원이 응급후송되었음.

이번 사건은 사전에 아무런 징후가 없던 우발적 사고로 보기 어려움. 우리 군은 2025년 9월 위성영상 분석을 통하여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넘어와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보이는 지형 변화를 이미 식별하였음. 적이 우리 관리지역에 지뢰를 묻었을 가능성을 군 스스로 확인한 것임.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동안 추가 매설을 차단하거나 현장을 확인하거나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지금까지 없음. 군은 그 기간 유엔군사령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밝히고 있으나, 협의가 이어지는 동안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사이 지뢰 매설 구역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조차 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1년 만에 처음으로 그 위험지역에 들어간 작전에서 장병들이 다쳤음.

해당 지역의 북한군 지뢰 매설 경고는 국제기구를 통하여도 이미 전달되어 있었음. 유엔군사령부는 2026년 6월 23일자 팩트시트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음. 첫 번째 의심 지점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나 나머지 지점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지점에 대한 접근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음. 특히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는 방어적 조치로 볼 수 없어 그 자체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대응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하였음. 위험은 문서로 경고되어 있었고, 위반 여부를 가릴 기준도 함께 제시되어 있었음.

유엔사의 조사는 한국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협조하여 현장 접근로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유엔사가 나머지 의심 지점에 접근하지 못하였다면, 우리 군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협조를 하였는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함. 합동참모본부는 9월 10일 군사분계선 이남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인 지형 변화를 식별하였다고 설명하였고, 사고 일주일 전인 9월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유엔사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하였음. 팩트시트 발행 이후 사고 발생일까지 약 3개월 동안에도 실질적인 현장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은 의혹을 키웠음. 과연만 분석하여도 매설주체를 상당 부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임에도, 정부는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난 9월 28일에 이르러서야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은 여러 방향에서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음.

첫째, 유엔군사령부는 이미 6월 23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합동참모본부도 9월 10일 군

사분계선 이남에서 인위적인 지형 변화를 식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사고 지역 일대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가능성이 이미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있었다는 의미임.

둘째, 지뢰 방호 덧신을 착용한 상태에서 우리 군 M14 대인지뢰에 의하여 발목이 절단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군 안팎의 일반적인 설명임. 이번 피해가 절단상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폭발물의 종류를 좁히는 단서임.

셋째, 합동참모본부가 9월 28일 발표한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 남쪽 10여 미터 지점이고,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과는 10여 미터 떨어져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정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되었고 철제 파편은 나오지 않았으며, 1차 폭발 지점 약 1미터 인근에서 북한군 목함지뢰와 유사한 형태의 갈색 목재 계열 반보병지뢰가 발견되었다는 진술이 있었음. 폭발한 2발 외에 철수 과정에서 1발이 추가로 발견되어 원점 일대에만 3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는 우리 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존재하지 않음. 한 지점에 세 발이 모여 있는 상황은 빗물에 떠내려온 유실 지뢰로는 설명되기 어려움.

넷째, 사고 현장에 있던 인원들 중에서 북한군 목함지뢰를 목격하였다는 복수의 증언이 전해지고 있음.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합동참모본부도 지뢰폭발 사고 이후 일주일인 지난 9월 28일 1차 조사결과를 통하여 뒤늦게 북한군 매설 지뢰 가능성이 높다는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음.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 일주일인 이유임. 지형 변화 지역의 존재와 아군 지뢰 매설 기록의 부존재는 사고 이전부터 군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임. 그 사이 정부는 '미상의 폭발'이라는 설명을 유지하였고, 국민과 국회의 질의에 사실상 답하지 않았음.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언제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확보된 시점과 발표 시점 사이에 어떤 검토와 결재가 있었는지가 규명되어야 함.

특히 최초 보고서 작성 시 포함되어 있던 '북한 (목함) 지뢰 추정'이라는 표현이 보고서에서 삭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사고 직후 현장 지휘계선이 북한군 지뢰로 판단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면, 일주일 뒤 같은 결론이 공식 발표되기까지 그 판단이 어디에서 멈추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함. 정부는 이 의혹에 대하여 아직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음.

대통령의 대응 또한 납득하기 어려움. DMZ 지뢰폭발 장병피해 사건은 9월 21일 오전에 발생하였으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짧은 위

로 글을 올린 뒤 같은 날 오후 해외 순방길에 올랐음. 이후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우리 장병이 비무장지대에서 북한매설 추정 지뢰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음. 군 통수권자가 국제사회 앞에서 북한제재 완화,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면서, 바로 지뢰폭발로 다리를 잃은 자국 장병에 대하여는 한 문장도 말하지 않은 것임. 국군 통수권자가 장병의 피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남은 장병들이 국가를 어떻게 신뢰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임. 아울러 사건 발생 시점부터 순방 출발 시점까지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었는지도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또한 사건 직후인 9월 21일과 22일 유엔군사령부가 현장 출입, 임무수행 영상 공유, 작전 참여자 면담을 포함한 신속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우리 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조사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룬 것은 중대한 문제임. 그 결정이 어느 선에서, 어떤 사유로 내려졌는지조차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그사이 사고 현장에는 많은 비가 내렸고, 9월 27일에야 이루어진 한·유엔사 합동조사에서도 조사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지뢰 사고의 원인 규명은 현장에 남은 파편과 폭발 흔적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 현장이 훼손된 뒤에 시작하는 조사로는 매설 주체는 물론 폭발의 경위조차 확정하기 어려우며, 결국 조사를 하고도 밝히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수 있음. 조사의 지연이 그 자체로 진상규명의 실패를 낳을 수 있는 사안임.

아울러 사고 전후 관련 부대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통제와 함구령 등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작전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통제와, 사고 경위에 관한 증언과 기록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

조사의 지연은 부상 장병에게도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돌아감. 적대행위로 인한 부상인지가 확정되지 아니하면 전상 처리와 그에 따른 예우·보상 절차도 함께 미루어지기 때문임. 부상자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어 발표된 것 역시 단순한 집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퇴원자를 포함한 다수 장병의 상이 구분과 보상이 걸린 문제임.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각급 제대의 상황일지, 보고서 원본과 기안문 초안, 보고서상 표현의 수정·삭제 이력, 유엔사와 주고받은 공문, 바디캠 및 감시장비 영상, 수거 증거물 목록과 감식 경과, 사고 대응 매뉴얼의 이행 기록 등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가 이루어졌으나, 정부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음.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태도는 그 자체로 축소·은폐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을 형해화하는 일이기도 함.

장병을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려면 그 위험을 먼저 알려야 하고, 장병이 다쳤다면 그 원인을 끝까지 밝혀야 하며, 이후의 치료와 삶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함. 이는 어느 정파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군인

에게 지는 기본적인 의무임.

이에 국회는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와 보상, 증거보전, 2025년 9월 지뢰 매설 식별 이후의 조치 및 유엔군사령부 협의 경과 규명 등 자료 제출, 야당 및 야당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국정조사,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과 기한, 그리고 불이행 시의 후속 조치를 명시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 나경원의원 등 105인이 발의한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안한 것으로 보임.

2026년 9월 21일 육군 제25사단 관할 DMZ에서 수색로 개척작전 중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이전부터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로 의심되는 지형 변화가 식별되고 유엔군사령부도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현장 확인이나 위험 제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고,

또한, 사고 이후 북한군 지뢰 가능성에 대한 공식 판단이 늦어졌고, 최초 보고서의 ‘북한 지뢰 추정’ 표현 삭제 의혹과 함께 사고 관련 보고·지시 및 유엔사 조사 협조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고 있음.

아울러 유엔사의 신속조사 요구에 대한 대응과 현장조사가 지연되면서 증거 훼손 및 진상규명 차질 우려가 제기되었고, 장병 휴대전화 통제·함구령, 부상자 수 변경, 전상 처리 및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회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지뢰의 매설·유입 경위 및 관련 조치 전반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고 전후 모든 보고·기록과 유엔사 협의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증거보전을 요구하는 한편,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진상조사 및 청문·국정조사 등을 통해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함.

□ 동 결의안은 총 6개의 장과 68개의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문 및 제안이유에서 제기하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① 사고 직후 작성된 최초 군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목함지뢰 추정’ 문구의 삭제 의혹, ② 사고 다음 날 북한 지뢰 관련 장병 진술을 확보하고도 공식 발표가 지연된 점, ③ 사고 발생 후 합동 현장조사가 상당 기간 지연된 점, ④ 북한 지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초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제기하고 있음.

구분	주요내용
제1장. 부상 장병 국가 책임	국가 책임 원칙 확립 및 치료·재활·보상·예우 전 과정에서 장병·가족의 절차적 부담 최소화
	사고 후송 장병 전원에 대한 상이 구분 절차 실시 및 부상 경중과 관계없이 적정한 예우·처우 보장
	부상 장병의 군 복무 지속 의사 존중 및 계속 복무 여건 보장, 전역 시 보훈·재활·취업·생활지원 연계 등
제2장. 증거보전· 자료 훼손 금지	사건 관련 영상·사진·상황일지·보고문건·공문 등 자료의 폐기·삭제·편집·재분류 금지 및 기존 훼손 자료의 내역 보고·원상복구
	회수된 폭발물 파편·잔해의 목록·보관현황 제출 및 국과수·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차 감정 실시
	휴대전화 사용·SNS 게시·함구령 등 보안통제의 근거·범위 공개 및 과도한 통제로 인한 증언·기록 보전 저해 방지 등
제3장. 25. 9. 지뢰 매설 식별 이후 조치 및 유엔사 협의 경과 규명	2025년 9월 최초 식별 이후 사고일까지의 정부 조치 전모 공개 및 미조치 사항 명시
	사고 직후 유엔사의 현장조사 요구 접수·보고·의사결정 경위 및 즉시 조사 미실시 사유 규명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으로 유엔사에 공식 회부하고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 요청 등
제4장. 25. 9. 북한지뢰매설 식별 이후 조치 경과 등 자료 제출 요구	- 사전 인지·보고자료 - 사고 당시 지휘·보고 및 보안통제 - 현장조사·증거보전 자료 - 폭발 원인·지뢰 종류 규명자료 - 대통령실 보고 및 전방작전·감시체계 자료 등
제5장. 전문가 참여 진상조사단 및 청문회· 국정조사	야당 추천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 구성 및 현장 접근·자료 열람·관계자 면담 보장
	본 사건 및 북한 포로 송환 문제 관련 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 긴급 연석청문회 개최
	유엔사 팩트시트 이후 조치, 현장조사 지연, 장병 후송·치료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등
제6장.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및 이행 점검	2025년 최초 식별 이후 미조치 및 장병 투입에 대한 지휘·정책 판단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인사·법적 책임 검토
	무인장비 우선 적용 등 작전절차 개선, 지뢰 방호장구 재점검 및 응급후송·중증외상 대응능력 강화
	조사 종료까지 매주 진상조사 및 부상 장병 치료·보상 진행상황 국회 보고·공개 등

□ 동 결의안은 이번 사고가 우리 군 장병들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뢰가 폭발하여 중·경상을 입은 사안으로, 사고 원인과 지뢰의 매설·유입 경위뿐만 아니라 사고 이전 위험요인의 식별 및 조치, 작전계획과 병력 투입의 적정성, 사고 발생 이후 상황보고와 현장조사 등 군의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해서 확인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임.

□ 특히 2025년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형 변화가 식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보고되고, 위험 고지·출입 통제·지뢰 제거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고,

또한, 사고 이후 북한군 지뢰 가능성에 관한 최초 판단 및 보고 내용의 변경 여부, 부상자 규모 발표의 변동 경위, 유엔군사령부의 현장조사 요청과 우리 군의 대응, 현장조사가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실시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보고절차나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의사결정과정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임.

□ 아울러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영상자료 등 관련자료의 정확한 보존과 검증이 필요함과 동시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등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동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장병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지뢰 위험지역에서의 작전에 대한 전반적인 재발 방지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임.

- ☐ 동 결의안은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합참 등을 비롯한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인식이나 전제하에, 정부 조사와 별도로 청문회나 국정조사와 같은 국회차원의 조사 과정 등이 필요하고,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우리 장병 및 가족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나경원의원 등 105인이 발의한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및 진성준의원 외 160인이 발의한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군사분

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대안)'을 제안함.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